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7/17(木)자 朝刊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통신 등은 7/16(水) 11:00부터

※ 문의 : 경제연구실 이경상 실장(02-6050-3471), 이상헌 과장(02-6050-3474)

새 경제팀 핵심미션 ‘경제혁신’ ... “이대로는 韓경제 성장궤도 복귀 어려워”

- 대한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상의정책자문단 대상 조사
- 現경제시스템으로 어중간한 국면 지속(61%) 또는 쇠락(37%) ... ‘성장궤도 재진입’ 2%에 그쳐
- 정책우선순위 ‘경제혁신’(57%), ‘혁신진작 병행’(24%), ‘경기진작’(17%) 順
- “제조업 공동화 우려” 76% ... 시작시기는 ‘현재 진행중’(42%), ‘3년 후’(33%), ‘5년 후’(21%) 順
- 경제활력 진작대책으로 ‘내수위주 체감경기개선책 바람직’(67%) ... ‘고강도 처방 원해’ 답변도 22%

“현재의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미션으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경환號에 대한 오피니언리더들의 핵심메시지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오피니언리더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경쟁력과 투자지속’ 24.4%> 그 시작시기도 ‘현재진행형’(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데 이어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나타나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오피니언리더들은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2.2%>

“규제개혁해 시장-정부역할 재정립하고 서비스고용창출에 힘써야”(최성호 경기대 교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필요”(박상인 서울대 교수)

“링거주사(경기진작)로 회복한 후 근력강화(경제혁신) 힘쓰되 소외계층도 배려해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ICT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 ‘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기타’ 3.2%>

경제혁신 우선순위 : 규제개혁·창조경제(43%), 균형발전(43%), 비정상의 정상화(11%) 順

오피니언리더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기타’ 2.1%>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제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2.2%>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 ‘규제신설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총량 관리’(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꼭 달성해야 할 과제로 보지 않는다’임>

부문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오피니언리더들은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 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60.9%), ‘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 ‘중소□중견기업 육성’(8.6%)순으로 응답해 취약부문 지원방식보다 부문간 선순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 2.2%, ‘기타’ 2.2%>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정부□공공부문 정상화’(55.6%), ‘기업부문 정상화’(24.4%), ‘교육부문 정상화’(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금융부문’ 2.2%, ‘평가보상체계부문’ 2.2%>

“내수체감경기 개선책 바람직”(67%) ... ‘규제개혁’, ‘서비스활성화’, ‘부동산정상화’ 주력해야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방위·고강도 경기부양책 추진’ 22.2%, ‘별도의 경기대책 펴지 않는 것이 바람직’ 11.1%>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자영업자 구조개선’(28.3%), ‘벤처창업환경 개선’(21.7%), ‘재정지출 확대’ 19.6%, ‘금리인하’ 19.6%, ‘지역경제 활성화’ 15.2%, ‘세부담 인하’ 15.2%, ‘기타’ 4.3%, 3가지 복수응답>


부동산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50.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폐지’(40.9%), ‘유지’(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 시기□지역에만 발동’(45.5%), ‘현행 유지’(38.6%), ‘폐지’(15.9%) 순이었다.

쟁점현안과 관련해 오피니언리더들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77.8%) 의견을 냈다. <‘반대’ 11.1%, ‘입장유보’ 11.1%>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 현실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단축’(48.9%)과 ‘노사자율을 통한 점진적 축소’(33.3%)가 ‘정책원안대로 단축’(17.8%)보다 많았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이라는 응답이 75.0%로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20.5%)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기타’ 4.5%>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진국 동향 및 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비교해 국내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77.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였다. <‘기업부담이 크므로 점진적으로 추진’ 2.2%>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 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2014. 7. 4(금) ~ 7. 9(수)
- ☐ 조사응답자 : 국민경제자문회의, 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 46인
- ☐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 전화조사